



CDI 세미나 2011-71

충남발전연구원 / 지역재단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합동 워크숍

##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의 길”

-활동가와 연구자의 교류 마당-

- 일시 : 2011년 11월 18일(금) ~ 19일(토)
- 장소 :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지역재단/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 지역재단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합동 워크숍

##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의 길”

-활동가와 연구자의 교류 마당-

### 1.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 18일(금) ~ 19일(토)
- 장소 :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지역재단/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2. 목차

#### ○ <여는 마당>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 충남의 내발적 발전과 농어업농어촌  
(박진도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 <나눔 마당>

: 대안의 실천과 미래 (각 10분씩)

-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의 현황과 생산자조직의 과제  
(김영규 /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육성사업단 사무국장)
- 우리밀 중심 지역농업 조직화 (최성호 /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 로컬푸드/공공급식과 대안 먹거리 운동 (허남혁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생협운동과 협동적 지역사회 (이재욱 / 생협전국연합회 전 사무총장)
- 지역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의 모색 (김억수 / 푸른서천21 사무국장)
- 식생활교육운동, 도·농 공생의 길 (황민영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 당면 총대선 정세와 대안농정 의제 (장상환 /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농업·농촌문제 국민적 공론화 과제 (김현대 /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 분권자치운동과 지역 활성화 (황한식 / 부산대학교 교수)
-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리더 양성 과제 (유정규 / 지역재단 운영이사)
- 현단계 농민운동의 과제와 실천대안 (최진국 / 참살이공동체 대표)

### 3. 세부일정

날짜	부터	까지	내용
11/18 (금)	15:30	16:00	접수 및 등록
	16:00	16:10	인사 및 상호소개 ▶ 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 / 6차산업화센터장
	16:10	16:40	<여는 마당>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 충남의 내발적 발전과 농어업농어촌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16:30	16:40	교류 다과
	16:40	18:30	<나눔 마당> 대안의 실천과 미래 (각 10분씩) ▶ 김영규 :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의 현황과 생산자조직의 과제 ▶ 최성호 : 우리밀 중심 지역농업 조직화 ▶ 허남혁 : 로컬푸드/공공급식과 대안 먹거리 운동 ▶ 이재욱 : 생협운동과 협동적 지역사회 ▶ 김여수 : 지역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의 모색 ▶ 황민영 : 식생활교육운동, 도농 공생의 길 ▶ 장상환 : 당면 총대선 정세와 대안농정 의제 ▶ 김현대 : 농업·농촌문제 국민적 공론화 과제 ▶ 황한식 : 분권자치운동과 지역 활성화 ▶ 유정규 :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리더 양성 과제 ▶ 최진국 : 현단계 농민운동의 과제와 실천대안
	18:30	20:00	저녁식사
	20:00	22:00	<토론 마당> 농업·농촌·농민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당면 실천과제 ▶ 좌장 :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사장/식생활교육국민네트 워크 상임대표
	22:00	23:30	<교류 마당>
	11/19 (토)	08:00	09:00
09:00		11:00	현장탐방(자연휴양림 산책)
11:00			해산 및 귀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 충남의 내발적 발전과 농어업농어촌 -

박 진 도

## I.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경제시스템의 변동

## 1. 신자유주의의 본질

-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 배제 혹은 최소화 즉 경제자유화와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지출의 삭감과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주장
- ◆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초국적 기업과 금융장본) 본위주의.
- ◆ 50, 60년대의 자본주의 황금기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일방적 우위에 기초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
- ◆ 세계화란 초국적 자본의 경제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기는 위한 이데올로기. 동시에 달러와 영어를 앞세운 미국화 즉 미국식 문화(제도)의 세계화

## 2. 사회경제시스템의 변동: 1극3중 경제에서 2극 3중경제로

- ◆ **자본주의의 golden age기의 사회경제구조**
  - 1극 3중 경제: 국민경제 ⇄ 국제경제와 지역경제
  -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형태로 국제경제와 지역경제가 존재.
  - 성장한 국민경제의 힘으로 복지정책과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
- ◆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의 사회경제시스템**
  - 2극 3중 경제: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 국내경제
  - 자본의 글로벌화로 국민경제는 별 의미가 없어짐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와 지역경제를 매개하는 역할
  - 세계경제의 순환성과 지역경제의 순환성이 대극으로서 대립

### 3.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경제의 현실

- ◆ 2001~2010년 국내총생산(GDP) 2배, 수출은 3.1배, 일인당 국민소득은 2배로 됨
- ◆ 5대 재벌은 2008.4~2011.4 3년 사이에 계열사 51%, 자산 59% 증가
- ◆ 수입명품 매출액 : 최근 5년간 100~200% 신장

• **중산층 비율 : 75%(1990년)→ 67%(2010년) 하락**

• **빈곤층 비율 : 7%(1990년)→12.5%(2010년) 증가**

- 2009년 절대빈곤층 비율 11.1%, 대도시 6.6%, 농어촌 지역 14.8%

• **소득의 양극화 : 5분위 소득 배율**

- 농촌 : 6.3배(1995년) → 9.4배(2008년)

- 도시 : 4.4배 (1995년) → 5.3배(2008년)



## II.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 1. 세계화와 지역

- ◆ 세계화와 지구적 위기: 경제위기(장기불황과 금융위기), 자원위기(석유 및 식량위기), 환경위기(기후변화)의 융합
- ◆ 지역경제는 세계시장에 통합되면 될 수록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흥망성쇠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좌우됨
  -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는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예, 서울)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성장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배제됨
  -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도시나 지역 내에서도 진행됨.

## 2.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 ◆ 지역의 불균형 발전
- ◆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붕괴
- ◆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 농촌경제의 쇠퇴
-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위협: 주거, 보육, 교육, 보건의료, 환경, 문화 등에서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
- ◆ 신자유주의 분권화에 의해서 지역의 자립과 재정력 강화를 강요.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환경의 위기와 지방재정의 위기, 주민의 삶의 위기를 초래

### 3. 세계화와 지역의 불균형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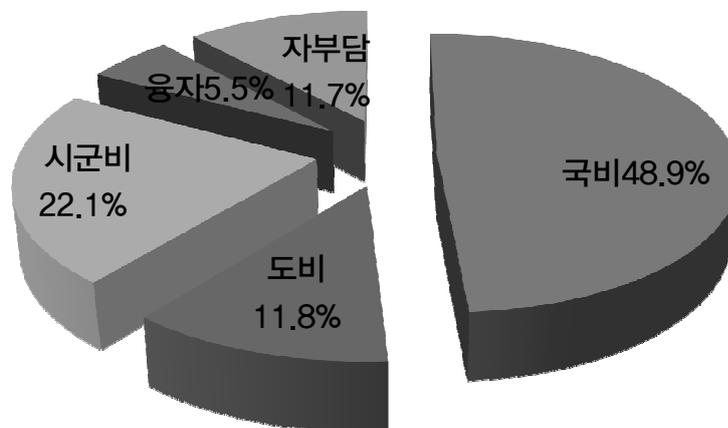
#### ◆ 지역내 불균형의 심화: 충남경제 사례

- 충남은 2000-2009년에 GRDP의 연평균증가율 9.1%로 전국 1위. 일인당 GRDP는 전국 2위.
- 충남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본사를 수도권에 둔 재벌계 대기업에 의한 수출산업.
- 그 결과 2008년 충남의 총요소소득 40조원 가운데 16조원이 역외로 유출됨.
-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서산,당진시 북부권의 4개 시가 충남 GRDP의 68.1%를 차지
-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2007년 기준)은 아산시(0.8%), 천안시(1.6%), 계룡시(2.6%), 당진군(4.8%), 서산시(4.7%), 청양군(34.4%), 부여군(29.8%), 서천군(17.9%), 보령시(17.5%), 태안군(17.1%), 예산군(15.6%), 논산시(14.1%), 공주시(12.9%), 홍성군(10.9%), 금산군(9.35), 연기군(7.1%)

### 4. 지방분권의 실태

#### [2010년 충남의 농림수산 사업비]

1조556억원



# Ⅲ.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의 강화

## 1. 지역(경제)의 재인식

- ◆ 지역은 주체적 존재
  - 지역은 주민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서 생활하는 공간
- ◆ 지역은 자립적 존재
  - 고용위기와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 지역경제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위로서 인식됨.
  - 예를 들면, 로컬푸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 ◆ 지역은 대안적 존재
  - 신자유주의 글로벌 위기(경제, 자원, 환경위기의 융합)는 그 자체로는 해결책이 없음.
  - 지역에서의 실천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

## 2. 내발적 발전의 의의

### ◆ 내발적 발전이란

- 첫째, 내발적 발전은 지역개발의 목표를 단순한 경제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합적 발전(integrated development)을 추구. 예, 부탄의 GNH 정책
- 둘째, 내발적 발전은 발전의 동력을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구한다(driven from within).

내발적 발전은 지역내의 자원(자연적, 인적, 물적, 문화적, 환경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보전)되도록 한다.

그렇지만 외부와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신내발적 발전)

- 셋째, 내발적 발전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발전, 주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 참조: 부탄의 GNH정책

- **“Gross National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Gross Domestic Product”.**
  - GNH Commission
- **4개의 전략**
  -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경제발전
  - 생태보전과 그 회복
  - 문화의 보전(문화적 정체성)과 창달
  - good governance
- **9 개의 영역(domain)과 72개 지표**
  -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시간활용(Time Use),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문화(Culture),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자연생태(Ecology), 생활 수준(Living Standard), 거버넌스(Governance)

### 3. 내발적 발전의 기본원리와 과제

- ◆ 지역의 내발적 발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순환과 공생의 원리에 기초한다
- ◆ 내발적 발전의 과제
  - 첫째, 순환과 공생의 자립적 지역경제를 만든다. 자립적 지역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의 활용과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제이다.
  - 둘째, 분권과 자치에 의한 지역생활공동체를 만든다.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고령자 및 장애인의 개호, 여성, 아동, 환경, 인권 등 제 영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실천활동, 주민자치운동과 공동학습
  - 셋째, 생태계 보전.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살리고 환경을 재생 창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

### 4. 지역력의 강화

- ◆ 지역력이란
  -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나 기업을 비롯한 지역의 구성원이 스스로 그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고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주체와 협동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
- ◆ Rop Hopkins
  - 먹거리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에서 자립적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재지역화(relocalization)의 힘

##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

- 친환경적 농업의 확대와 로컬푸드 체계 구축
- 생활공간, 경제활동공간, 환경 및 문화 경관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 3농 혁신

### ◆ 지역(기반)산업의 육성

- 지역특화 및 향토산업 육성
- 지역자원순환형 중소기업 육성

### ◆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보호

- 전통시장활성화
- 대형유통자본의 규제

##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 사회적 경제부문의 육성

- Defourny: 사회적 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립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개의 원칙에 따른 이해당사자경제(stakeholder economy)”
-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 ◆ 다중적 연계협력 사업

- 충청권(충남,충북,대전) 광역경제권의 건설
- 충남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
- 수도권과 충남의 연계: 예, 광역LCD 클러스터

##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 소프트 파워의 강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 문화(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능력의 창조)를 토대로 한 소프트 파워
- 보편적 복지재정의 확충, 복지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
- 노약자, 결혼이주자,여성,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
- 도민들이 상호 신뢰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 문화의 생활화, 생활문화 창달, 전통문화의 재창조와 향유

##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 지역리더의 양성 및 도민의 역량 강화

-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의 육성
- 지역밀착형 교육으로 지역에 남는 인재 양성
- 도민의 생애교육, 민주주의 훈련
- 도정 및 시 군정에 민간의 창의적 에너지 활용
- 귀농귀촌과 도농교류의 활성화

### ◆ 지방분권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분권 요구
- 분권을 전제로 한 충남도와 시군간 역할분담 및 협력
- 시민사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 도민의 참여 유도 및 도민의 창조적 에너지 활용.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

# IV. 충남의 농어업 · 농어촌의 발전전략과 과제

## 1. 농정의 비전(이념)을 국제경쟁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 로 전환

- 농업 : 시장원리가 아닌 협동과 연대의 원리
- 식량시스템을 글로벌 푸드시스템에서  
로컬 푸드시스템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의 목표
  - 농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만들기

## 2. 농정 추진체계의 개편

- 중앙집권적 획일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개편
- 농업농촌의 발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함

23

## 3. 충남 농정의 기본과제

- 삶터(생활공간)
- 일터(경제활동공간)
- 쉼터(문화, 경관 및 환경 공간)
- 농촌지역리더 육성

24

## 1) 삶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입 및 시행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순환하고 공생하는 지역

## 2) 일터: 경제활동의 다각화(농업의 발전과 6차 산업화)

- 친환경 농업의 발전
- 로컬푸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6차 산업화

## 3) 쉼터: 농촌 문화,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 4) 주체 형성: 농촌 지역리더 양성

25

# 맺음말

# ?

26

## 국민 전체가 응원하는 농업·농촌

- 일본의 2010년 '신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농정의 기본방침으로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를 표방, 예산 지원
-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 :  
'Food Action Nippon'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 :  
'all right 일본'과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 한국 농어업·농어촌의  
“희망버스” 는?

27

감사합니다.



#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의 현황과 생산자조직의 과제

김영규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산업육성사업단 사무국장/  
前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1. 친환경농업운동의 현황

○ 한국사회의 근대화, 산업화과정에서의 증산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자각(1970년대 중반)으로부터 출발, 농업인 주도, 소비자운동과의 결합을 통한 성장,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의 도입(90년대), 법 제도 정비, 2000년대에 접어들며 급속성장(정책적 육성, 지방자치와 결합한 확산)

### ○ 생산현황과 시장규모

- 2010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인증물량이 전체농림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 농가수 비중은 15.6%, 면적 비중은 11.3%, 인증량 비중은 12.9% 차지
-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10년 3조 7천억원 수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으로 추정. 2020년에는 6.6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2000년	2010년	비고
농가수	2,448호	183,918호	75배 증가
인증면적	2,039ha	194,006ha	93배 증가
인증량	35,406톤	2,215,521톤	63배 증가

### ○ 조직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94~) : 생산·소비·기술·인증 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30여개의 조직을 망라, 대 정부 정책활동, 제도개선사업 교육 및 연대사업 등을 수행. 생협 전국대표조직(생협법인 전국연합회) 결성 지역단위 조직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구성 등에 따라 사업 및 조직 재편의 필요성 대두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전남북, 충남북, 경북 강원 경기 인천 제주 등 9개 광역조직 포괄하여 2011년 4월 창립, 농업 일반의 과제에 대응하는 운동적 과제와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유통 소비에 대응하는 사업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하는 조직적 위상을 갖고 탄생.

## 2. 현장의 문제인식과 문제제기

### ○ 보편적인 성공모델이 존재하는가?

- 현재 성공모델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
- 한살림, 생협 등 안정적 계약생산과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책임소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홍성 풀무, 아산 푸른들, 팔당생명살림 등의 사례 / 충남 홍성 홍동농협 강화도 친환경농민회와 농협의 위탁판매방식 등은 특수사례

### ○ 마을단위, 생협 직거래, 소규모 농업경영체 단위 사업은 유효한가?

- 농업인들은 농협과 행정의 배임 속에 스스로 작목반,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의 농업경영체를 설립하여 생산과 함께 식품가공, 유통에 나서왔고 많은 어려움과 한계 노정
-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유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을 갖춰야 하지만 대개의 농업경영체는 특정 품목 또는 몇 가지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며 영세성 빈약한 자본 마케팅 능력 부족, 전문인력 결핍 등으로 인해 시장이 요구하는 다양성과 대응력을 갖출 수 없었음. 급식의 경우도 최소한 수십 가지의 품목을 제공할 수 있어야 입찰 및 (수의)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품목을 납품할 수 있어야 때로는 특정 품목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진을 믹스하면서 유지할 수 있음.
- 지역별, 시기별로 주생산물이 다르기 때문에도 시군 또는 광역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농업인간 협력이 필요. 시군을 넘어 광역적인 협력체계와 경영주체를 세우는 것이 필요. 지역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농업 설계 및 운영의 한계, 개별 경영체의 배타적인 사업 경쟁 및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 통합적인 발전전략 없는 지방자치의 문제와 사업난발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 개별 농업경영체는 정책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 교육 등에 있어서도 한계 분명

### \* 시장가격을 누가 결정하는가?

- 농업인의 조직화와 규모화 정도와 비교했을 때 시장과 유통자본의 규모화 집중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 2000년대로 접어들며 유통자본에 생산이 종속, 편재되는 현상 두드러짐.
- 농업인들이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권이나 교섭력은 현저히 떨어짐. 적정가격을 보전하는 일은 물론이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자들은 여러 산지가격을 비교해가며 가격을 하락시킴.
- 유통 대책 없는 지방자치체간의 생산지원 정책 경쟁과 소비증가세를 능가하는 생산증가의 결과로 2000년대 중반이후 전통 있고 규모화된 친환경농업 산지의 가격주도권이 유통자본쪽으로 이동.

### 3. 친환경 생산자 조직의 과제

#### ① 조직적 과제

- 품목별 조직화 보다는 지역적 조직화
- 시군 및 광역적 생산 및 유통 조직화
- 광역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조직화

#### ② 이념적 과제

- 환경보전형 농업, 지속가능한 생산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선도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
- 소비유통에 대응한 농업의 주도성, (보조와 지원에 따른 의존성과 객체화에 대응한 자생력 구축

#### ③ 사업적 과제

-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유통에 대한 광역적 생산 조직화
- 유통에 대한 대책을 동반한 생산확대
- 기초 및 광역, 전국단위 행정과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비효율, 낭비, 중복 사업에 대한 배제와 조정)
- 의무자조금 도입



# 우리밀 살리기 운동

최 성 호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1990년 한국가톨릭 농민회 1세대들이 대전 가톨릭농민회 회관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더불어 사는 운동 (도시와 농촌)
- 2) 생명운동 (무농약,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 3) 우리밀 살리기운동 (종자 30만가마 확보)

을 목표로 민주화 운동과 농민 권익 투쟁을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밀 종자 14kg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200평 밭에 밀을 파종하였다. 이때는 수입밀가루 99%정도를 각 가정에서 애용하였고 가격 차이는 6배 차이로 인해 수요가 줄면서 생산농민들이 밀 파종을 하지 않아 종자 구입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90년대 수입 개방의 시대에 구례에서는 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오이생산이 평당 5만원의 고소득을 올린 반면 우리밀은 1평당 1,500원의 수익 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밀 생산을 거부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농민 운동을 하면서 변화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농민회원들과 광의면장을 설득하여 우리밀 생산의 필요성을 교육하게 되었다.

밀 수입이 350~400만톤(1억 가마/40kg)가 들어오고 우리밀보다 6배 싼 가격으로 수입된 밀은 우리나라 밀가루 시장을 100% 장악해 버렸다.

구례 지리산 산골 구만리 200평 밭에서 자란 밀 싹이 돋아나면서 수입밀과 우리밀 경쟁은 시작 되었다. 14kg에서 시작된 우리밀은 200~600가마(40kg) 생산이 늘어나면서 우리밀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제분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옛날 물레방앗간 소형 제분 시설을 찾아보았으나 그 흔적마저도 없었다. 대한제분, 동아제분 등 대형 수입밀 제분 회사들은 수백억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소형제분 공장시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본도 없고, 제분에 대한 경험도 없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 광의면장으로 부터 1읍면 1특품사업단 사업을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회원들과 회의를 하여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전남도청으로부터 우리밀은 특품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는 즉시

전남도청 특품사업 담당자를 만나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 하였으나 거절 되어 매일 찾아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위하여 사업단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눈물어린 호소를 하여 5번 만에 사업이 확정되어 총 사업비 1억4천 만원(보조9천만원, 자부담5천만원)으로 창고 200평, 제분시설, 국수기계, 누룩기계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품사업단을 만들고 자부담 5천만 원을 조성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50만원 100만원도 부담하기 힘들어 공장을 신축하는데 조합원이 나와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출자금으로 자부담을 만들어 나갔다.

1993년 곡물 분쇄기로 통밀가루를 생산하여 전국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납품을 시작 하였으나 밀가루의 찰기가 부족하고 거칠어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고 1년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밀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었다.

이후 1994년 3억을 투자하여 제분 롤러밀 2대, 혼들 체 4대를 설치하여 15년간 제분을 하였다.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의 제1구례공장, 제2무안공장, 제3합천공장, 제4정읍공장, 제5아산공장에서 우리밀 제품을 생산 하였으나 1997년 I.M.F 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부도나면서 외부자본에 의존했던 공장들이 다 폐쇄 되었다.

제1구례공장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산, 가공, 유통 사업을 우리 힘으로 전환하면서 제2의 우리밀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전국 우리밀살리기운동으로 부터 위탁 가공만하는 우리 공장으로서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 수매.가공. 판매를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1년은 우리밀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2002년 2,500가마, 2003년 5,000가마의 우리밀 생산이 다시 시작 되었다. 이러한 생산조직의 저변확대와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공장에서는 2007년 자체부담금 11억5천 국.도 지원금 8억5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격화하여 1일 제분 300가마/40kg 1년에 4,000M/T 제분 시설을 갖추면서 밀가루 품질을 향상 시켜 수입밀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밀 공장은 영농조합원 43명이 참여하고 15명의 일터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며, 구례 농민 400명과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며 지역민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자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 결과적으로 농업이 몰락하게 된다.

이 대가는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던 도시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고 지역 경제가 파산 될 것이다. 젊은이는 도시로, 농촌은 고령화로 공동화 되어 건강한 먹 거리를 일부 수입에 의존

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의 먹 거리를 위협받고 외화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밀 공장은 매우 중요하다. 수익이 창출되면 모두 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우리공장의 이익 10%는 생산 농민들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밀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농민의 땀과 희망 그리고 정성을 담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 도,농 공동체를 실현 하고자 한다.

곡물의 생산은 자원이다. 햇빛, 공기, 물, 흙, 노동력이 제공되면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농민들은 이득을 창출하게 된다.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수입밀을 이용하여 과도한 부를 독점화함으로써 우리밀 생산 기반이 붕괴 되었다.

그러나 우리공장은 우리밀의 생산, 가공, 유통을 일원화 하여 비록 수입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밀 살리기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애국적 소비자들이 가꾸어 낸 힘이라 생각한다.

우리 공장은 정부 밀 정책이 없던 20년 동안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품질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서 수입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

지구촌의 기상재해로 식량부족과 국제 곡물 가 폭등으로 인한 먹 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20년의 경험을 살려 묶어진 2모작 땅에 밀을 심어 식량 무기화에 대비 할 것이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하여 생산, 가공, 유통 이익이 지역과 농민에게 돌아가는 모범된 공장을 가꾸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짐한다.



# 로컬푸드, 공공급식과 대안 먹거리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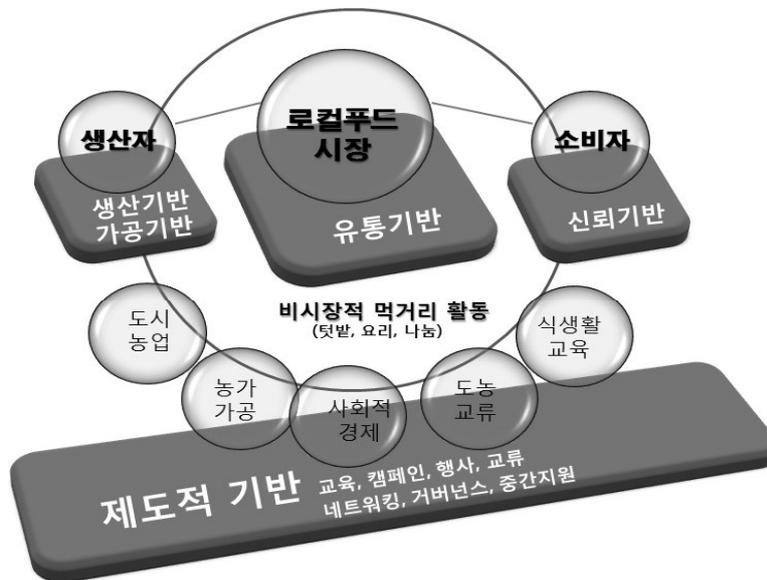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 ○ 대안먹거리운동

- 현재의 산업화, 글로벌화되어 있는 푸드시스템을 바꾸는 운동: 환경, 건강, 지역, 농민 측면
  - 유기농, 생협운동, 슬로푸드, 로컬푸드, 공정무역, 'good food', 'food justice', '식량주권' 등의 개념
  - 로컬푸드 또는 '푸드시스템의 로컬화' 의 중요성 대중적 소구력 정책적 간명함
- =>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 ○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요소들〉

유형	세부 유형		
로컬푸드 시장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농민장터: 농민장터 신설 또는 기존시장 재활성화(재래시장, 5일장) 직판장: 도로변, 마을, 관광지, 도심 꾸러미(CSA) / 지역생협 농가식당(음식점, 빵집, 떡집, 카페, 정육점 등)	
	생산자-구매자 직거래 (준직거래)	일반 영역	외식: 음식점, 빵집, 떡집, 카페, 정육점 등 급식: 기업체/단체급식소 유통: 식재료 유통, 꾸러미 유통, 지역판매장(지역생협/구매클럽) 가공: 가공업체 원료공급 관광: 관광업소/관광지 연계판매 복지: 푸드뱅크, 푸드마켓, 무료급식소 공급
		준공공적 영역	로컬푸드 허브(사회적 지역유통센터)
공공 영역	공공조달: 일상품목, 행사품목, 선물 등 공공급식: 학교급식, 시설급식, 기관급식 등		
로컬푸드 비시장	자가생산-소비 요리활동 먹거리 나눔	비농업인의 비시장적 영농활동 농촌 도시지역 공동체의 조리 및 요리활동(마을공동취사, 커뮤니티 키친) 먹거리 나눔활동	

유형	세부 유형	활성화 방안		
로컬푸드 연계	생산자 연계	농가가공	농가가공 활성화(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농민가공센터 조성)	
		도시농업/근교농업	비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 근교농업/농지의 유지 및 다기능화	
		친환경농업/지역순환농업	지역고유품종 발굴개발, 다품목 소량생산화	
	소비자 연계	사회적경제/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 확대, 도시,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조율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체험마을 방문 활성화, 1사1촌/1교1촌 활성화	
로컬푸드 시장		지역내 관련 주체들과의 연계 활성화 중앙집중적 유통구조의 개선과 지역도매시장의 재정비 통합적 마케팅/홍보 활성화 대기업 시장진입의 규제 다양한 판로의 개척과 판로간 연계 강화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연계 강화 로컬푸드 상품의 다양화(가공품, 지역산물 확대)		
로컬푸드 제도	계획수립/제도정비	로컬푸드 계획, 지역순환농식품체계 계획 관련 조례 제개정, 관련 주체 양성계획 전담부서/중간지원기구 설치 지역인증제도 정비		
	거버넌스/협약	거버넌스 기구 구성 지역사회 협약, 기업체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약 등		
	네트워킹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 네트워크 조직 결성 관련 NGO 활성화		
	정보 교류	포럼, 심포지엄/토론회, 구매자 농촌현장방문 목록화/지도화, 가이드북		
	교육 인력양성	식교육, 체험활동, 요리교실 로컬푸드 교육(학교 교과과정, 전문종사자, 생산자, 일반인 대상) 전문인력 양성(로컬푸드 코디네이터 등)		
	연구 조사	농식품체계(지역 생산-유통-가공-소비실태) 연구 조사 로컬푸드 현황 조사		
	캠페인/ 이벤트	로컬푸드 캠페인, 지역경제 캠페인, 바른 식사 캠페인 로컬푸드 축제, 일일행사(로컬푸드의 날), 로컬푸드 챌린지, 컨테스트		
	컨설팅	로컬푸드 사업체 컨설팅		
	기금 조성 및 운영	로컬푸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 ○ 향후 방향

- 1) 다양한 대안먹거리운동들을 아우를 포괄적인 틀의 정립과 사회적 합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농업적/공급자적 주장에서부터 공공보건과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으로의 전환  
⇒ 수요자 그룹의 동참이 절실: 보건의료계, 요식업계(영양사, 요리사)
- 2) 시민사회와 지역 역량의 강화: 먹거리운동 영역의 활성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전제
- 2) 정책적 솔선: 공공급식을 시작으로 하여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한 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중앙정부, 지자체의 정책, 제도개선, 캠페인 등의 노력)
- 3) 계획의 수립: 민관협력 차원에서 지자체의 먹거리 계획 수립(지역순환농식품체계 기본계획, food strategy, food system 계획, food program 등)  
- 농업생산, 공급, 소비/영양, 식문화, 식교육, 지속가능성 등 푸드시스템 관점에서 종합적 고려 (프랑스의 국가식품프로그램 사례)

## 농업 농촌 먹거리 관련 메가트렌드 검토

### ○ 식량-과잉생산 시대의 종말과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 강조

- 식량-물-에너지의 희소성 증대
-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을 넘어서 저투입농업, 기후친화적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으로
- 지역자원순환형 농업: 종자, 에너지, 물, 양분의 지역순환을 통한 외부투입 최소화

### ○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 농업-비농업 간 근대적 이분법의 소멸, 융합 현상과 농업 농촌 기능의 다각화/전환

- 생산주의적 농업 농촌 ⇒ 탈생산주의적(post-productivist) 농업 농촌으로의 전환
- 다기능적(multifunctional) 농업 농촌 농업 농촌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으로의 전환
- 농가경제의 다각화 현상: 직판을 중심으로 가공, 체험, 교육, 식당 등의 6차산업적 복합화(직거래의 재발견)
- 시민농업, 호혜농업, 생산자-소비자의 먹거리 공동생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reconnection)
- agricultural urbanism, 도시농업, 근교농업(peri-urban agriculture)의 재발견
- 사회적농사(social farming)의 등장

### ○ 농업 생산에서 먹거리 소비 정책으로의 전환

- 먹거리 소비에 대한 공적 개입을 통한 건강한 식사 증진정책으로의 전환: 미국 농무부, 프랑스 농림부, 일본 사례 등 (중장기 계획수립, 법률 제정, 범국민적 캠페인)

- 농식품 공공조달정책의 활용: 학교급식, 먹거리 사회복지(노인 영유아 등)

### ○ 가족 소농의 재발견

- 경제적 효율성만의 잣대에서 사회적, 생태적 측면까지 고려 확장 => 농촌사회, 농업자원환경의 보호관리자 역할
- 비아캄페시나의 '식량주권' 개념: FAO로의 수용(식량권 등)

### ○ 지역화(지역적 영역화, 영역적 연결)의 강조

- 농업정책, 농업거버넌스의 수평적(지역적) 재편: 과거 국가주도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 지역적 혁신체계로의 전환: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결을 위한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생산자 조직에서 영역적 조직으로의 전환: 농업 부분만의 조직에서부터, 지역 자원을 공유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직으로의 전환
- 농공상 연대정책: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주체 간의 제휴 협력의 강조(ex) 유럽의 지역 협동조합(또는 환경 협동조합): 특정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새로운 협동조합

### ○ 공유경제, 공유소비 경향의 확산

-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공유소비(헌책 검색시스템, 텃밭 소유자-경작희망자 중개사이트 등)
- 자연자원의 공유소비, 공유관리 개념

### ○ 윤리적 소비 추세 확산

- 관계적 소비의 확산: 공정무역(공정관광), 로컬푸드
- 수제품, 전통의 재발견: 슬로푸드의 확산
- 환경보호, 지구온난화 문제의식: 유기농, 저탄소 제품 선호



## 생활협동조합운동과 협동적 지역사회

이재욱

생협전국연합회 전 사무총장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은 일제하에서 노동자들의 소비조합이 있었으며 원산 노동자 총파업시 원산노련 소비조합이 보급기지 역할을 함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지원하였다. 노동자들의 소비조합운동은 일제시대 말기부터 해방이후까지 오랫동안 단절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소비자협동조합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단절된 역사로 인해 출자나 배당에 대한 이해나 훈련이 되지 않았고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로 이어지는 극우, 반공 정권은 공유(共有)경제에 대해 붉은 색을 덧칠하여 협동조합 등의 공유 경제를 시도,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농촌에서의 협동운동은 1960·70년대 공업화 개발독재 과정에서 이농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줄면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한국 농업의 문제를 농민들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선각적 농민들과 여기에 동의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결합이 낳은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농촌과 광산촌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시작될 무렵인 70년대 말은 지방의 간선도로망이 부실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인구가 적어서 도로망이 더욱 부실하여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싸게 공급되고 있었다. 이 무렵 남한강의 수해 피해 지원사업을 하던 강원도 원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남한강 상류지역의 농산촌과 광산촌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자립의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했다. 이런 지원사업의 결과로 강원도 평창에서 신리소비자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수도권의 도시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어지간한 시군구에 소비자협동조합이 하나 이상씩 설립될 정도로 확산되었다.

90년대 들어 지방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현대화된 유통자본이 등장하면서 구판장형 소비자협동조합은 급속히 몰락하여 89년부터 95년 사이에 대부분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문을 닫는다.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이 위기를 맞았을 때 생활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은 일본의 생협 특히 생활클럽생협이나 그린코프를 견학하였던 소비자협동조합의 간부들에 의해 「농업·농민들과 함께하는 안전·안심의 먹을거리 공동구매」라는 생협 활동이 소개되었다. 이를 토대로 1985년 5월 안양소비자협동조합(현재 바른생협)이 유기농의 공동구매, 가까운 농촌지역의 생산지 개발, 무점포 반(班)공급을 시행하며 최초로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6년 서울제기동에서 시작된 한살림운동은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전형을 만들었다.

1990년대 까지 어렵게 유지해 오던 생협운동은 90년대 이후 외국농산물의 수입 확대와 잔류농약의 문제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더해지면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점차 정착되고 확대되어 갔다. 느리게 확산되어가던 생협운동은 1999년 12월에 생협법이 제정되고 유기농산물 등 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생협운동은 60만 세대가 넘는 조합원, 1조원이 넘는 공급고를 이루고 있다.

현재 지역생협의 대부분은 한살림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iCOOP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등 사업연합에 편재되어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생협법에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규정이 신설되었다. 생협법에 따른 생협 전국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 그 동안 활동해 왔던 사단법인 생협전국연합회는 해산을 하였고 생협법인 전국연합회를 창립하기 위해 한살림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준), 한국의료생협연대 소속 생협들과 독자생협들이 모여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iCOOP생협연합회 소속 조합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생협법인 전국연합회를 구성하려면 인가된 생협의 과반수가 참여해야 창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영리형 유사의료생협이 1년 동안 100개 가까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전국연합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대해 부정적이며 iCOOP생협 또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협법인 전국연합회의 창립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개정된 생협법에는 협동조합의 원칙 중 7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른 협동조합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생협운동의 지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생협은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왔다.

안성에서는 농민들과 의료인들이 함께 만든 안성의료생협이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민들과 안성의 소비자들이 안성두레생협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한살림에서는 ‘가까운 먹을거리’운동을 내세우며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 한살림생협의 가까운 지역 산지 개발 및 생산과 소비의 지역내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지방 중소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자생협들의 경우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생협을 설립하여 지역농업 소비의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구매의 어려움으로 사업연합 소속 생협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운동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원주지역의 지역과 부문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체들의 협의체이다.

원주지역의 협동운동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1969년에 진광학원의 부설로 협동조합연구소가 세워지면서 지역의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낸 원주지역의 협동조합 운동은 한동안 쇠락의 시간이 있었으나 2003년에 밝음신협의 제안으로 원주지역의 협동운동체들을 대상으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새롭게 창립하는 조직들도 함께하면서 참여의 폭이 넓어졌고 2009년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활동으로 2003년 협동조합 공통신문인 월간 <원주에 사는 즐거움>을 창간, 2005년 3대 조례제정운동추진, 2006년 GMO FREE ZONE 운동, 2007년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협동조합간의 인적 교류와 협동사례,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하면서 원주 지역을 협동조합의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성미산마을** 마포구 성산동의 성미산이란 작은 산 주변에 터잡고 사는 사람들과 마을조직들의 네트워크인 '성미산마을'은 2001년 성미산지킴이 싸움을 하면서 싸움의 주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넘어서 지역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과 이듬해 낚으는 어린이집이 설립되면서 마을 공동체의 싹이 피어난다. 초기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방과후 학교, 마포두레생협을 함께 만들면서 친밀과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이런 유대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자는 결의와 터전을 마련하려는 모색을 연결되었다. 이 무렵 터진 성미산 개발정책은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낳게 했고 협동조합에 참여한 가족들 뿐 아니라 지역의 제 단체와 주민들이 결합하면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은 더욱 공고해 졌다. 2003년 성미산지킴이 운동은 승리를 하였고 '성미산마을'이라는 상징적 이름을 얻게되었다.

이후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성미산학교(대안학교),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자동차정비소),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 FM(소출력공동체라디오), 되살림가게(재사용 순환), 한땀두레(바느질 작업장), 작은나무(마을 카페), 마포연대(풀뿌리 시민단체), (사)사람과마을(마을만들기 단체), 성미산마을 자동차두레(카 웨어링),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준), 마포청년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학부모회 등 협동조합과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성남지역의 협동운동

성남 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형성된 도시이다. 그래서 광주대단지사건 등 빈민문제가 상존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주민문제에 관심을 가진 수도권 특수선교협의회 소속 주민교회와 지역 주민운동가들이 주민신협과 주민생협 등 협동운동을 시작하였다. 성남시는 현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성남용인한살림생협과 성남의료생협, 행복한성남생협, iCOOP성남분당생협 등 생협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지와 지역주민운동, 생명운동 등을 함께하고 있다. 성남지역에서 협동조합들이 함께하는 협동운동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 주민운동의 저력이 있고 지역의 생협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최근에는 '성남지역 협동조합협의회'에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협동조합간 협동과 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체, 일본의 생활클럽생협의 인사들과 지역 협동조합운동가들 및 전국의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 4일동안 '살림의 경제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의 경제,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협력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협동운동을 고양하기 위gi 협동조합간에 다양한 협동과 협력을 시도, 실천하고 있다.



## 지역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의 모색

김 역 수

푸른서천21 사무국장

에너지와 물질 순환을 거스르는 신자유주의적 생활방식과 자연에 대한 태도는, 현 세대는 물론 다음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뿌리 깊은 자본주의 신앙의 오류는 승자독식의 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고 있다. 녹색혁명형 농업, 생물권의 파괴와 감소, 화석연료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고통, 지구적 빈곤의 재생산 등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소유, 그리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추구하는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가 계속되는 한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는 지역순환형사회운동은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 호혜와 신뢰를 채워 넣는 새로운 대안사회로의 길을 지역과 마을에서부터 모색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지역순환형사회를 위한 서천지역의 자그마한 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천군은 인구 6만에 13개읍면(2개읍, 11개면)이다. 재정자립도는 충남 최하위 수준이고 농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52%), 서비스업(19%), 제조업(9%), 수산업(6%)] . 그러나 인구고령화, 문화여가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 경제적 낙후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서천군이 지닌 장점은 지리적으로 산과 강, 바다로 이어져 있으며 갯벌과 철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천군은 ‘어메니티 서천’, ‘생태도시 서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생태환경과 경제의 관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천나눔공동체]

서천나눔공동체는 지역화폐운동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2008. 12).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물품, 재능 등을 지역화폐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적 삶과 경제적 도움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성, 소비위주 생활방식의 관성 등 운동성의 확산이 과제로 남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



자료: 서천군

(지역학교 - 서천생태문화학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지역교육은 주민들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따라서 우리지역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나게 한다. 서천생태문화학교는 서천의 생태, 역사문화, 농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지역학생과 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헌과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식생활교육운동과 도농상생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 식생활교육과 농업, 농촌

오늘 우리 농업은 위기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가경제는 쇠퇴하고, 농민들은 농업과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농업생산성은 정체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도농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경제 도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높아가고 있다. 농업이 쇠퇴하면 토양,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

우리는 농업, 농촌이 식량만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농업, 농촌은 생태, 환경, 지역을 보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레저, 관광,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산업, 복합공간으로서 평가되고 보상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농업을 생명의 기초이고 원천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고 소홀리 취급되고 폄하되고 있다. 농업은 우리의 전통문화, 협동, 두레, 세시 풍속 등 상호부조의 협동적 사회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온 뿌리이고, 지금까지 국민의 기초적 먹을거리를 풍족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은 많은 일자리 제공,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정서 함양, 공동체 문화의 형성, 전통 문화의 계승 등 공공적 기능과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공적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적 농업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와 기능, 공공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식량생산, 식품소비, 그리고 국민건강에 이르기까지 농업, 농촌과 관련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했고,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식생활교육정책과 민간네트워크

국가는 최근의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생활속에서 녹색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식생활의 3대 핵심 가치를 환경, 건강, 배려로 설정하였다.

식생활에서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과 관련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배려) 식생활 정신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식생활교육의 1차 5개년 계획의 비전을 <건강한 국민, 녹색식문화>로 설정하고, 3대 핵심 가치이자 목표인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푸드마일리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음식쓰레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아침밥먹기 실천율과 전통 조리법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된다. 배려와 감사한 마음을 배양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참여율을 높여 먹을거리 제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법이나 제도, 정책 특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자발성, 창의성, 주체성을 갖고 식생활교육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여건을 확립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식품의 영양, 조리, 안전은 물론이고, 식품선택, 식사예절 등 식생활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과 실천 역량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식생활교육운동을 통하여, 국민식생활의 바탕인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조성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이다.>

<식생활교육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정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국가식생활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 등 전국적인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토론과 교류, 전문가 조직과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범국민적 생활 실천과제를 개발, 실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확대 등 다양한 식생활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창립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추진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지역네트워크를 시·도, 시군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제정운동과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계획이다.

식생활교육이 가정, 학교, 지역, 기업, 기관 등에서 효율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민관 협력 및 도농 협력형 교육모델과 지역 공간 활용형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보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식생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생활교육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사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 기회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생활교육 주체들이 식생활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교육 교재를 연령별, 대상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식생활교육은 특정한 대상, 특정한 시기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은 어느 한 부처만의 책임이거나 주체가 될 수 없다. 식생활교육은 국가적으로 범부처적 역할이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이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프로그램화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는 이를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국가는 5개년 단위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각 광역시도, 시군구는 국가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그 실적을 5개년 마다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국민식생활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식생활교육관련 민간조직으로써 식생활교육관련 정책, 정보, 인적 교류의 터미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당면 총선·대선 정세와 대안농정 의제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젊은 세대의 정치 반란, 결국 자유주의로 회귀될 수 있다

외환위기와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의 결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식도 높아져가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0, 30, 40대 젊은 세대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성향은 기성 정치에 대한 정치적 반란이라고 할 정도다.

그동안 심화되는 양극화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시장의 힘에 압도당했다. 노동조합의 힘이나 정부 권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재분배를 통해 기층대중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포기했다. 젊은 세대와 서민층의 지지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조차 분배를 중시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보고 대중들은 희망을 접었다. 대신 각자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747공약(7% 성장률, 1인당 소득 4만달러, 7위 경제대국)을 내걸었을 때 성장의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한 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벽에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20대는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빚을 지고, 대학을 나와도 청년실업자가 되거나 비정규직에 취직하게 된다. 30대는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결혼해서 살 집을 사거나 전세로 얻으려면 큰 빚을 내야 하고, 월세로 얻으면 수입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 40대는 자녀 사교육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또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노후를 위해서도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 더 이상 빚을 내어 생활하거나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 20, 30, 40대의 젊은 세대는 당연히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확충 요구가 거셌고, 대학등록금 대책은 취업후 상환제에서 반값 등록금으로 급속하게 발전해갔다.

이들이 복지재원을 축소시키는 부자 감세 정책을 고수하는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와 함께 증세에 미적거리는 민주당도 믿지 못한다. 최근 한겨레가 실시한 정치세력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40%, 민주당 11%, 제3세력 39%, 진보정당 세력 2%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고 안철수, 박원순 ‘혁신과 통합’ 등 제3세력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제3세력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과 통합하여 거대 야당이 출현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젊은 층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는 제3의 정치세력이 진정 진보정당이 될 수 있는가이다. 야권이 대통합된다면 민주당이 주요 구성 부분이 될 것이다. ‘혁신과 통합’ 등 친노세력도 과거 한미FTA 찬성 등으로 볼 때 자유주의 세력이다. 민주노동당도 자주파 등 주도세력은 국민참여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정치적 활로를 열어가려 한다. 이렇게 보면 제3의 정치세력은 또 다른 자유주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식 보수양당 체제로 굳어지면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가 대단히 미흡한 미국식 모델로 귀결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에 대해 노동자들은 선거 때 지지하지만 집권 후에는 실망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 후 민중들의 생활상의 문제 해결 보다는 민주개혁 의제에 집중한 탓에 지지를 잃어갔고, 결국 2008년 분당에 이르렀다. 진보신당도 민생의제를 구체화하고 대중적 활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진보대통합도 리더십 부족으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서구의 경험에서 보듯이 자본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는 진보정당의 활동은 복지 확충과 재분배도 촉진한다.

## 대안농정 의제

한국의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소득보장적인 농업보호정책단계를 생략한 채 시장지향적 농업자립정책단계, 즉 신자유주의 농업정책단계로 옮겨갔다. 그 결과 대량의 농산물 수입과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식량자급률도 크게 하락하고 말았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까지 해결한 과제인 농업생산성과 농업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의 과제를 한국은 아직 미해결인 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업은 이렇게 이월된 목표도 달성하면서 지속가능 농업을 해나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 식량자급률 대폭 상향

한국농업 최대의 과제는 현재 25% 남짓한 식량자급률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이는 2008

년부터 세계적 식량위기가 빈발하고 있고, 국내 농지와 농업종사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을 말하면서 자급률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남한 인구가 해방 당시 2000만명에서 5000만명으로 늘어났고 국민들의 식생활 양식도 많이 달라졌으니 자급률 50% 달성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앞으로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현재의 추세 유지와 정부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경우를 상정해 모의검토를 하는 등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보장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농업 증산은 농지이용률을 현재의 105% 수준에서 150% 이상으로 올려야 가능할 것인데 이것은 농가소득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꿈도 꿀 수 없다. 따라서 농정 전문가와 통상법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증산유도형 농가지원정책과 WTO 농업규정과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지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을 대량 수입하고 식량자급률이 아주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식량자급률을 일정한 정도로 높일 때까지 국경보호와 국내 가격 지지정책에 대한 WTO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저장, 가공, 폐기 등을 통해 유통에서 배제하는 유통명령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시행을 어렵게 한 것도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로, 농업계의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공황 당시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에 직면해 생산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가격 지지정책을 도입한 것은 고전적인 농업보호정책의 전형이다.

## 농정의 민주화와 농협개혁

농민의 농정 참여 등 농정의 민주화가 대안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는데 농민이 농산물 유통 가공자본과 농업자재 생산자본, 그리고 정부와 맞서는 것은 농업회의소와 같은 형식적인 틀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조직화된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의존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우유값 결정과정에서 낙농육우협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은 그만큼 우유 생산 농민들이 강력하게 조직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이 강화된다 해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둘러싸고 농업 관련 생산, 유통 자본과 치열한 대결에서 농민의 단결력이 약하면 실속은 자본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대형유통업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지 유통조직에 대한 납품가 인하, 과도한 판 매가 인하와 미끼상품 활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

가하고 있다. 결국 농산물 유통개선은 생산지의 농가 협동 유통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매시장에 경매하든, 대형유통업체에 바로 공급하든 농민들의 시장교섭력이 있어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도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진정한 농협 개혁을 통한 경제사업 대폭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영농조합법인과 농협 연합경제사업 등 밑으로부터의 농민 조직력을 강화해 농협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한미 FTA에서 농업부문 삭제 내지 재협상

한·미 FTA는 현재의 내용으로는 비준해서는 안되며 재협상해야 한다. 첫째,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식량위기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의 존립 근거를 부정한다. WTO 농업협상이 진행 중이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 곡물재고가 과잉상태였지만 한·미 FTA가 타결된 2007년 이후 2008년에 세계 식량가격이 폭등했고, 2010~2011년에도 급등했다. 식량수출국에서 수출을 금지하면 식량자급률 25%로 대량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달리가 있어도 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 식량이 모자라 배급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식량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WTO 협정에 의해 이미 시장개방이 진행 중인데 관세율을 더 빨리 내리려는 한·미 FTA의 농업부문 내용은 재협상해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내놓은 농업부문 보완대책은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15년 동안 12조 6675억원 규모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농축수산업 분야에 10년간 21조1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했다. 지난 8월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으로 추가로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기적 피해보전 장치로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와 폐업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근본적 체질개선책은 고령농 경영이양 확대, 주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확충, 농가등록 시행 및 농업법인 활성화 등이다. 축사, 과수시설,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돈을 쏟아 붓는다.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보완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가소득 감소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보다는 간접적인 보상을 하는 부분이 더 크다.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 저리 융자해주면 실질적인 혜택은 농자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자본에게 돌아가 버린다. 보완대책이 실시되더라도 농가소득 보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적절한 보완 대책은 소득보전특별법, 부채동결법 등의 제정으로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경쟁력 확보, 농촌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단·중·장기적으로 농업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

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FTA 보완대책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게 될 재벌 등 이득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내서 피해를 본 농민과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동안 자본 측은 계속해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 한·미 FTA 역시 규제완화로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농민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말하는 산업간 이해 조정을 믿지 못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비준은 충분한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해야 한다. 우선 작물별 농업 생산 위축, 농가소득 감소 등 한·미 FTA에 따른 피해규모를 정확히 계측해야 한다. 비농업 부문을 대상으로 재정 확보에 필요한 부담을 요구할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다양한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이 중요하다.

MEMO





